"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인정한 한덕수 … 사퇴 버티는 이상민

〈총리〉 〈행안장관〉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이태원 참사' 문답…한덕수 "제대로 일 못했다"
이상민 "현 위치에서 최선"…野, 고위직 해임 등 국정 쇄신 건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방역이 해제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으니 행사가 커지고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을 안 했다"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했는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추모공간 설립을 제안하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는 없다"며 "관련 기관이나 유족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퇴론과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 들어온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역대 장관들 중에서 이 정도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을 안한 분을 찾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은 형사 책임만 근거로 거취를 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사고 뒷수습과 이와(이태원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인 급선무"라고 재차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의 대응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소 의원은 "당시 사고 당일에 총리가 사표를 냈고 문책성으로 서울시장이 경질됐다"며 "대통령은 '이 사고는 일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총리가 사의를 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 해임 등 국정의 전면 쇄신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문책론 대신 현재 이뤄지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신속·정확한 수사를 맡기기에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나"라고 반문하면서 "함부로 특검(특별검사)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야권이 대통령실 이전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참사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참사 당일 벌어진 정권 퇴진 집회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데 경찰이 가 있어서 제대로 (참사 대응을)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38억원 고용부 공모사업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고용안전 패키지 총괄, 경력 없는 신생 법인 선정"

사업비 480억원대에 이르는 고용노동부의 '광주지역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이하 고용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을 놓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공방이 일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민주·서구1)은 8일 광주시 경제창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진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한데도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고용안전패키지 사업 선정자인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고용안전 패키지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진원의 사업포기로 총괄 기획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A연구원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간 광주시 제안으로 광주TP에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과 고용안전패키지 지원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한 달 뒤 고용안전패키지 공모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긴급 현안질문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TP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했던 담당자가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진 않는다"면서 "광주경진원과 광주TP가 '총괄기관을 맡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

지방정가 라운지

안평환 "광주테크노파크, 업추비 과다 지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은 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의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재)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인 광주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용역 파견이라는 편법을 통해 관용차량 운전원을 고용하고, 경조사비 지출을 규정보다 초과 집행하거나 관할구역 밖의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에게 축·부의금과 화환 등을 부당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가를 허가하고, 허위 공가 신청자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데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13개부서 28명 전원이 1178회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직원 복무 관리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심창욱 "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부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심창욱(민주·북구 5)의원은 8일 "암·신장질환·백혈병 등의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 파악도,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60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가 지난해 12월 15일 제정 됐음에도 시교육청이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능이며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최대 3000만원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 아픈 학생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올해 난치병 지원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24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 위원회 논의를 거쳤다"며 "난치병의 경우 쉽게 치료가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1회성 지원보다는 3000만원 내에서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